

日 아베노믹스 실시 성과 중간점검 및 시사점



CONTENTS

목 차

요 약 / 1

1. 추진배경 및 정책 목표 / 3

2. 주요 정책별 실시내역 / 4

3. 성과 중간 점검 / 11

4. 성과종합 및 시사점 / 15

참고. 일본 부흥 전략의 액션 플랜 / 19

요 약

- 2012년 말 아베정권이 출범하면서 90년대 초 거품경제 붕괴 이래 지속된 디플레이션으로 ‘잃어버린 20년’ 이라는 장기 불황을 겪어 온 일본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해 이른바 ‘아베노믹스’ 라 불리는 경제정책을 추진
- 아베노믹스의 정책목표는 디플레이션 탈피로서 일본경제의 장기침체가 총수요 부족에 의한 지속적인 물가하락에 있다고 진단, 총수요 진작을 가장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함. 이와 함께 엔고 시정도 일본정부가 명시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아베노믹스의 중요한 비공식 정책 목표의 하나임
- 아베노믹스는 일본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장기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① 금융 완화, ② 재정투입 확대, ③ 성장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임
- (금융정책) 인플레이션 목표(2년 내 물가수준 2%)를 설정하고 유동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일본은행은 구로다 신임 총재체제 출범이후 첫 금융정책 결정회의(2013.4.4일)에서 통화공급량을 2012년 말 138조 엔에서 2014년 말까지 270조 엔으로 확대하는 등의 확대 금융정책을 결정
- (재정정책) 2013년에 전년대비 2.5% 증가한 최대 규모 예산(92.6조엔)을 편성하고 추경(10조엔)을 통해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재정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소비세 인상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 방지를 위해 2013년 하반기 중 2차 추경 5조엔 편성 추진 중)
- (성장전략) 일본부흥전략이라는 기치 아래 ① 일본산업 부흥 플랜, ② 전략 시장 창조 플랜, ③ 국제진출전략의 3대 정책수단을 강구키로 하고 2013년 10월 15일 소집돼 12월 6일까지 열리는 제185차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 본격 실행한다는 계획임

요 약

- 2013년 11월 현재 아베노믹스는 5월~6월중 주가 하락, 엔고, 장기국채 금리 상승이라는 일시적 위험 요인을 극복하고 금융완화를 통한 엔저 유도, 디플레이션 탈피를 향해 순조로운 출발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다만 아베노믹스의 주요 정책인 성장전략이 아직 입법단계에 있고, 미국 재정문제 및 출구전략, 미흡한 실물경제 파급력, 실질소득 증가 미흡 등 리스크 요인도 함께 존재하고 있어 아베노믹스에 대한 성과 점검은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할 수 있음
- 아베노믹스의 행배에 대한 국내외 시각은 엇갈리고 있으나 성패의 열쇠는 실물 경제 회복(기업 투자 확대 → 소득·임금 증가 → 소비 확대의 선순환 구도)으로 모아지고 있음
- 일본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규제 완화)과 새로운 성장전략의 추구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아베노믹스는 향후 성공이나 또는 실패이나 여부가 평가를 나겠지만 어느 경우든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 만큼 성공·실패 모든 경우에 대해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함.

1

추진배경 및 정책 목표

□ (추진 배경) 잃어버린 20년으로 대변되는 장기 불황 탈피

- (오랜 경기침체) ‘12년도 일본 GDP는 480조엔(5.1조 달러)
 - ’90년 이후 23년간 엔화기준 8%, 달러기준 66% 증가에 그침
 - * 미국 2.8배, 한국 4.6배, 중국 23배 증가, ‘10년 중국에 추월, 3위 하락
- (장기 디플레) ‘98년 이후 15년간 2년을 제외하고 소비자물가 하락
 - ‘98년 소비자물가를 100으로 할 경우 ’12년 말 96.4 기록
- 일본경제 장기침체의 원인
 - 3대 공급과잉(설비, 채무, 인력), 정보화·디지털화시대 대응 실패
 - 인구감소 및 고령화 : 2004년 이후 총인구 감소, 고령화율 24.1%(‘12년)
 - * 고령화율 : 미국 13.1%(’10) 한국 11.1%(’10)
- (정권 장악)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 참의원 선거(‘13.7.21일)에서 압승해 장기집권 기반을 구축

□ (정책 목표) ① 디플레이션 탈피, ② 円高 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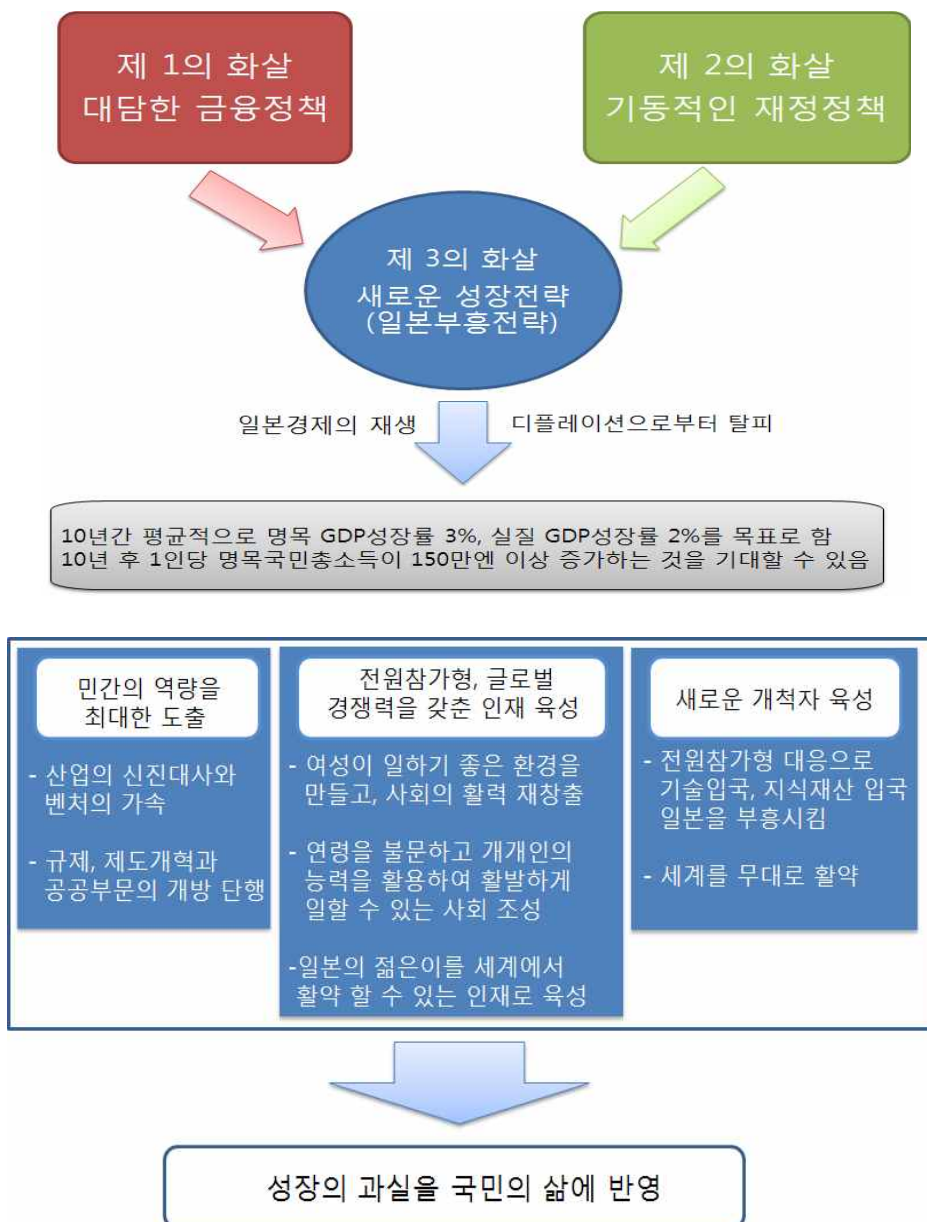
- (디플레이션 탈피) 소비자물가 상승률 2년 내 2% 달성
 - 일본경제의 장기침체가 총수요 부족에 의한 지속적인 물가하락에 있다고 진단, 총수요 진작을 가장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설정
- (엔고 시정)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일본정부가 엔고시정을 명시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지만 아베노믹스의 중요한 비공식 정책목표의 하나
 - 일본정부는 엔화 환율의 정책적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음.

2 주요 정책별 실시내역

가. 아베노믹스의 골자

일본경제의 근본적 문제인 장기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① 금융 완화, ② 재정투입 확대, ③ 성장전략을 동시 추진

<아베노믹스의 정책 개념도>



□ 일본부흥전략의 3개 액션플랜

- 일본부흥전략은 성장실현을 향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으로서 일본 산업부흥플랜, 전략시장창조플랜, 국제진출전략의 세 가지 액션플랜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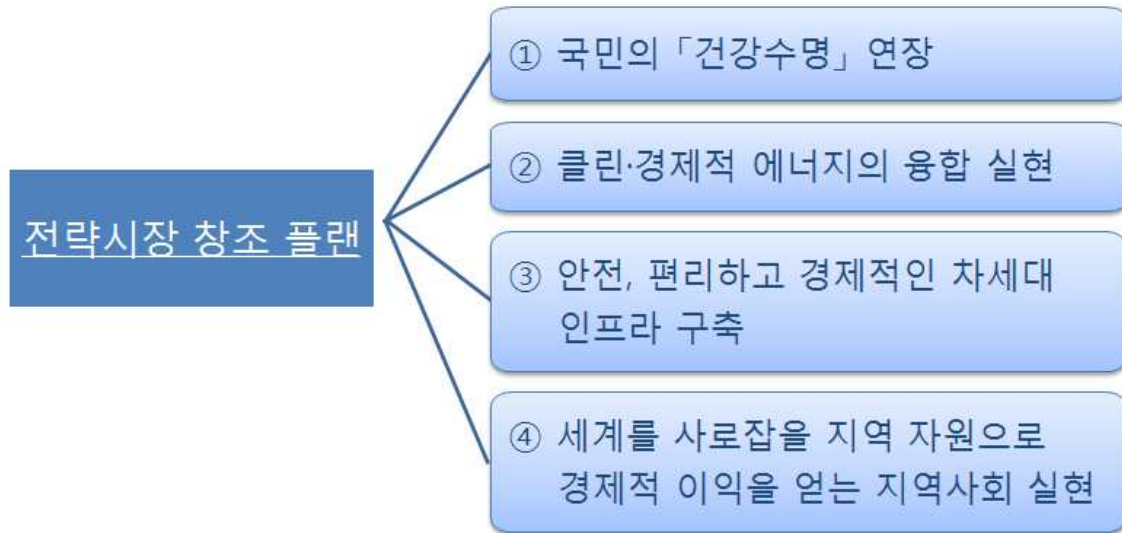
① 일본산업 부흥 플랜

-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해 온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창출
 - 산업의 발전과 개인의 가능성이 최대한 발휘되는 사회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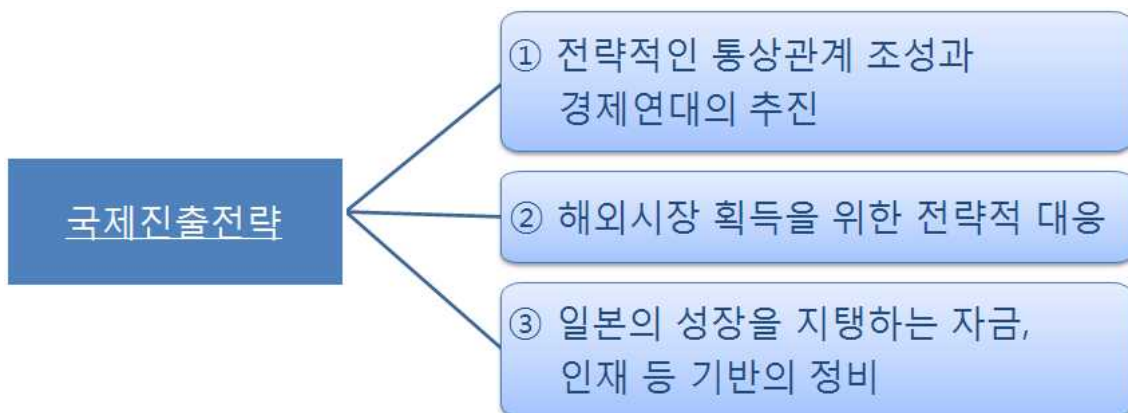
② 전략시장 창조 플랜

- 세계와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과제 중 일본이 국제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는 4개의 전략분야를 선정
 - 이들 사회 과제를 선점,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분야를 개척



③ 국제진출전략

- 적극적인 세계시장 진출과 대내직접투자확대 등을 통해 세계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일본으로 유치하고, 세계의 경제 성장을 리드함
 - 이를 위해 일본국내의 철저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국내외에서 민관협력에 의한 전략적인 대응전개



나. 주요 정책 실시 현황

1) 금융정책

□ (금융완화) 인플레이션 목표(2년 내 2%) 설정, 유동성 확대

- 본원통화 공급 확대 : 138조엔('12년말) → 270조엔('14년말)
- 장기국채 매입 확대 : 89조엔('12년말) → 190조엔('14년말)
- 상장지수펀드(ETF¹⁾), 부동산투자신탁(REIT²⁾) 등 위험자산 매입

* 연간매입규모 확대 : 상장지수펀드 1조엔, 부동산투자신탁 300억 엔

□ (실시현황) 일본은행(구로다총재)은 '13년 4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도입함.

- 금융시장의 정책목표를 무담보콜금리에서 본원통화로 변경
- 장기국채의 매입액을 대폭 늘려 자산규모를 약 2배로 확대

〈주요 실시사항〉

정책	시행 내용
통화량 공급 확대	- 통화량이 연간 약 60-70조 엔 증가하도록 금융시장조절 시행중
장기국채매입 확대	- 장기국채 보유잔액이 매년 약 50조 엔씩 증가하도록 매입 시행 - 장기국채의 매입대상을 40년 채권까지 포함, 평균殘存기간을 현행의 3년에서 7년으로 연장
상장지수펀드, 부동산투자신탁 매입 확대	- 각각 연간 1조엔, 300억 엔씩 증가하도록 매입 실시 중

자료원 : 일본은행

1) ETF : Exchange Traded Funds(상장지수펀드)

2) REIT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부동산투자신탁)

<일본은행 밸런스시트의 추이와 전망>

(단위 : 조엔)

		‘13년3월말	‘13년9월말	‘13년말전망	‘14년말 전망
본원 통화		146	185	200	270
밸런스시트의 항목과 내역					
자산	장기국채	91	126	140	190
	CP등	1.2	1.6	2.2	2.2
	社債등	2.9	3.0	3.2	3.2
	ETF	1.5	2.2	2.5	3.5
	J-REIT	0.12	0.14	0.14	0.17
	대출지원기금	3.7	7.4	13	18
	자산합계	164	208	220	290
부채· 순자산	은행권	83	84	88	90
	당좌예금	58	97	107	175
	부채합계	164	208	220	290

자료원 : 일본은행

2) 재정정책

□ (정책 내용) 최대 규모 예산 편성 및 추경을 통해 공공투자 확대

- ‘13년 2.5% 증가한 92.6조엔 예산 편성, 공공사업비 16% 증가
- 긴급경제대책(추경예산) 10.3조엔을 추가 편성

<2013년도 일본 예산 개요(일반회계)>

(단위 : 조엔)

예산종 주요 세출		금액	전년비 증가액
국채비용		22.2	0.3
기초적재정수지대상경비		70.4	2.0
주요 경비	사회보장관련경비	29.1	2.7
	교육과학기술진흥비	5.4	0.0
	지방교부금	16.4	△0.2
	공공사업관련비	5.3	0.7
합계		92.6	2.3
긴급경제대책(10.3조엔)을 포함한 재정지출			102.9

자료원 : 내각부

□ (실시현황) 추경예산의 성립 직후(‘13.2.26)부터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진행상황을 수시로 경제재정자문회의에 보고

- ‘13.6월말 기준 긴급경제대책(추경예산)의 진행상황은 총 사업 건수 372건 중 317건(전체의 85.2%)이 실시완료 또는 실시 중으로 파악됨
 - 이러한 재정확대 기조로 ‘14년도 정부예산예산은 ’ 13년 9월 현재 99.2조엔(각 부처 요구액)으로 사상최대 기록함.
 - 공공사업비를 담당하는 국토교통성은 전년 대비 16% 증액요구
 - 국채비용은 ‘13년도 예산 대비 14%증가한 25.3조엔(예상)
 - 또한,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충격완화를 위해 2차 추경예산 수립 중
 - 아베수상, 10.1일 내년 4월부터 소비세율 인상(5%→ 8%) 발표
 - 현재 추진중인 2013년도 제2차 추경예산은 5조 엔 규모로 예상됨.
- * 공공사업비 증액, 법인세 감세, 투자촉진감세, 주택구입감세 등이 포함될 전망

3) 성장전략

□ (기본 방향) 규제완화 + 대외개방을 축으로 성장 동력 확보

- 총리 직속 「일본경제재생본부」 주도로 성장전략 제시(6.12)

□ 성장전략의 세부 내역

- 산업부흥, 전략시장창조, 국제화전략 등 3개 액션플랜으로 구성

산업 부흥 플랜	전략시장 창조 플랜	국제화 전략
일본의 산업기반을 강화	새로운 성장분야를 개척	글로벌 경제에서 승리
▷ 긴급구조개혁 프로그램 (산업신진대사 촉진) ▷ 고용제도 개혁, 인재활용 ▷ 과학기술혁신 추진 ▷ 세계최고 IT 사회 실현 ▷ 입지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 혁신	▷ 국민 건강수명 연장 ▷ 청정,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 실현 ▷ 안전, 편리, 경제적인 차세대 인프라 구축 ▷ 글로벌화 지원	▷ 전략적 통상관계 구축, 경제연대 추진 ▷ 해외시장 확보 ▷ 성장을 지탱하는 자금, 인재 등 기반 정비

□ (실시현황) 성장전략 추진을 위한 관련법안 입법 추진 중

- 아베 내각은 ‘13년 10월 성장전략 추진을 위한 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제185차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

3

성과 중간 점검

가. 관전 포인트

- 금융정책에 의한 엔저 유도 ⇒ 추가 엔저 가능, 다만 소폭에 그칠 전망
 - 지금까지의 '엔저 흐름'은 무제한의 통화 공급을 선언한 아베정권의 정책 효과에 기인
 - * 주요기관 환율전망('13년말) : 97~101(미즈호증권), 96~103(노무라증권)
- 디플레이션·장기불황 탈출 ⇒ 2~3년 소요됨을 감안 필요
 - 아베노믹스는 일본경제의 흐름에 대한 기대를 바꾸어 놓는데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
 - 기업수익 확대가 본격적인 소득증가 및 소비확대로 연결되려면 2~3년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기간 성장세를 유지해야하는 어려움 수반

나. 주요 정책별 중간 점검

1) 금융정책

□ (점검기준) 양적완화를 통한 2년 이내 물가 2%, 脫디플레 가능성

- 일본은행은 금번 금융완화를 통하여 2년 내 물가목표 2%를 달성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시장에 제시하는데 일단은 성공했다는 평가
 - 시장의 예상을 넘은 금융완화책으로 주가상승, 엔저가 진행
 - 일본은행 전망리포트 중간평가('13.7.11)에서 2015년도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 닛케이평균주가 : 8,664('12.11.14)→ 10,230('12.12.26)→ 14,376('13.10.28)
 - * 1달러당 환율(엔) : 79.5('12.11.14)→ 85.2('12.12.26)→ 98.20('13.10.30)
 - * 소비자물가지수(전년월동비, 전국, %) : △0.1('12.11)→ △0.2('12.12)→ 0.7('13.9)

□ (점검내용) 시장에 강한 인상 남기기 성공, 진짜 평가는 이제부터

- '13년 5~6월 주가하락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소폭 하락, 일본은행의 예상대로 물가상승이 실현될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

2) 재정정책

□ (점검기준) 재정투입 확대를 통한 경기개선, 脫디플레 가능성

- (경기개선) 가동적인 재정투입으로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유지
 - ‘13년 2분기 실질 경제성장율 : 0.9% (연율 3.8%)
 - 일본은행은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 고 2년 반 만에 경기 회복 선언(2013.7.11일)

<분기별 실질 경제성장율>

‘12. 2분기	3분기	4분기	‘13. 1분기	2분기
△0.2%	△0.9%	0.3%	0.9%	0.9%

자료원 : 내각부

- (경제지표) 소비자물가지수 플러스로 전환. 소폭 고용 호전
 - 소비자물가지수 : △0.4%(4월) → 0.0%(5월) → 0.7%(9월)
 - 백화점매출(‘13년 상반기) : 2.3% 증가 (귀금속 15.2%, 잡화 6.7%)
 - 완전실업율 : 4.2%(1월) → 4.1%(4월) → 4.0%(8월)
- (재정규율) 재정책대로 인한 향후 재정건전화가 주요 과제로 ‘13.8월 일본중기재정계획에서는 ’ 15년도까지 신규국채발행을 43조엔 까지 억제하는 목표 내세움.

* ‘13년도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³⁾가 △6.3%로 악화,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15년까지 3.7P 기초재정수지 개선이 필요한 상황

☞ PB(기초재정수지) 적자 : 34조엔 (‘13년) → 17조엔(‘15년) → 12조엔(‘20년)으로 축소 목표

□ (점검내용) 현재까지 경기개선에 기여, 향후 재정규율이 관건

- 재정책대를 통해 최근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 개선에 기여했으나 향후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세출억제, 세수확대, 금리억제 등의 대응이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미즈호종합연구소)

3) PB(기초재정수지)란 국채 등 차입금을 제외한 세입과 차입금 변제를 위한 경비를 제외한 세출의 차이를 지칭

3) 성장전략

□ (평가기준) 규제완화, 민간수요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가능성

- (성장전망) 일본경제는 하반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소비세 인상 후 소비 위축 우려
 - 내각부는 '13년 GDP 성장률을 2.8%로 상향(종전 2.5%)
 - 민간조사기관 예측 평균치 : 2.7%('13년), 0.8%('14년)
 - 소비세 인상('14년 4월)전 선취 수요 등으로 하반기 소비 증가가 예상되나, 소비세 인상 후 소비 위축 우려

* 97년 소비세 인상 후 경제성장률 추이
 - 2.6%('96년) → 1.6%('97년) → △2%('98년)

- (수출입) '13년 7월부터 수출에서 엔저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 '13년 1-8월 수출은 4,771억 달러(△11.7%), 수량기준(△3.6%)
 - '13년 6월까지 수량기준 감소세에서 7월부터 14개월만 증가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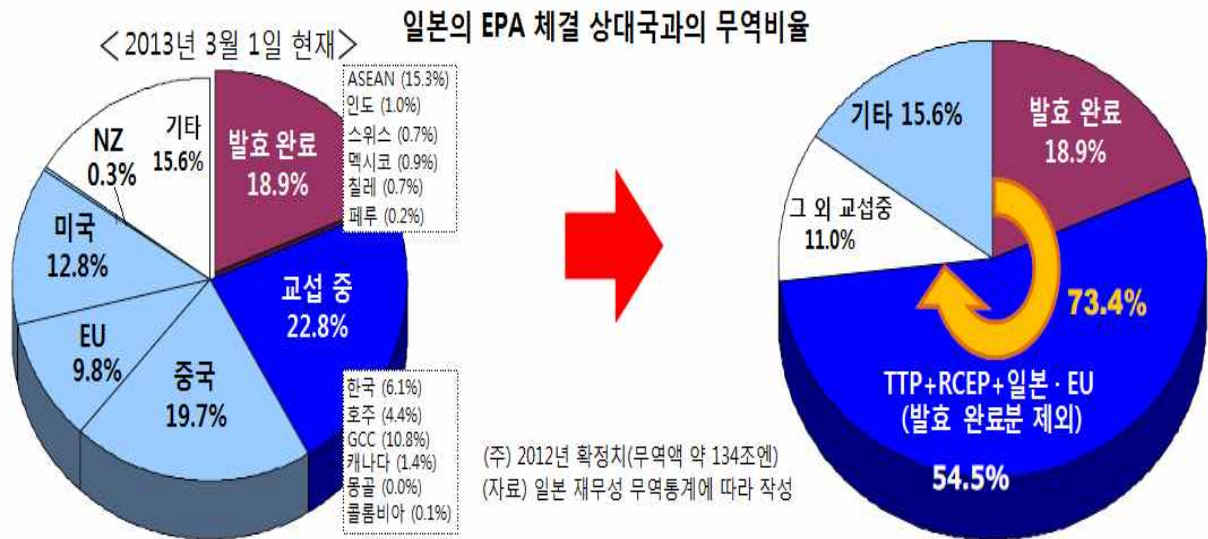
<일본의 월별 수량기준 수출실적>

(단위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5.9	△15.8	△9.8	△5.3	△4.8	△7.3	1.8	1.9

- '13년 1-8월 수입은 5,501억 달러(△7.3%), 수량기준(△1.1%), 730억 달러 적자
- (기업) 기업 영업이익율이 증가하고 생산지수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설비투자도 소폭 상승함. 하계 보너스는 35업종 중 25업종에서 증가(평균 1.64%)
 - 보너스 인상 업종 : 자동차부품(10.7%), 인쇄 (10.0%), 비철금속(4.1%)
 - * 전산업 설비투자(전년비) : △7.2%('12.10-12월) → △0.3%('13.1-3월) → 1.3%('13.4-6월)
 - * 기업영업이익(전년비) : △5.5%('12.10-12월) → 2.4%('13.1-3월) → 11.1%('13.4-6월)
 - * 광공업생산지수(전년비) : △7.6%('12.12월) → △3.4%('13.4월) → △0.4%('13.8월)

- (FTA추진) 성장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TPP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실현이 필요한 상황
 - 성장전략의 목표로는 FTA/EPA상대국과의 무역액 비율을 현재의 19%에서 '18년 70%까지 높일 것이 제시되어 있음.
 - * 현재 일본의 발효완료된 FTA국가와의 무역비중은 18.9%로서 TPP, RCEP 및 EU와의 FTA가 모두 발효되어야 73%까지 높일 수 있는 상황



- 2013년 거대경제권과의 FTA 협상 개시
 - . TPP : '13.7월 18차 협상부터 참가 개시
 - . 한중일 : '13.3월 1차 협상, 8월 2차 협상
 - . 유럽연합(EU) : '13.4월 1차 협상, 6월 2차 협상

□ (점검내용) TPP교섭참가 일정부분 성과, 규제개혁 등 향후전개가 관건

- 광범위한 성장전략(6월)을 수립하고, TPP교섭 참가를 실행에 옮기는 일부 성과를 창출하였지만 규제개혁 등에서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상태(미즈호종합은행)

4

성과종합 및 시사점

가. 성과종합

- 금융 및 재정정책을 통해 엔저 유도, 디플레 탈피를 향해 순조롭게 출발
 - 달러당 엔화가치는 ‘12년 11월 80.87엔에서 ’ 13년 10월 30일에는 98.20엔으로 20% 이상 약세 진행, 소비자물가지수는 ‘13년 5월 이후 플러스로 전환(’ 13년 3월 -0.5%, 7월 0.7%, 9월 0.7%)
 - * “2% 물가안정목표를 향해 착실히 전진하고 있다”(일본은행 구로다총재, ‘13.10.4일 금융정책결정회의 후 기자회견)
 -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록했으나 과도한 정부부채는 향후 재정지출 확대에 한계로 작용
- 금융완화 및 재정확대로 기대심리를 바꾸는데 성공했지만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의 주요 정책은 미 실시 상태로 실제 성과는 지금부터가 진짜

<일본은행총재 발표 요지(2013.10.4일 기자회견)>

-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상승하고 장기금리도 안정세를 보임
- 예상물가상승율이 오르고 실질금리가 하락하여 민간수요를 자극하고 있음
 - * 실질금리 하락은 주로 주택투자, 설비투자 등 장기투자에 효과 파급되고 있는 중
- 금융시장, 실물경제, 물가가 착실하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2% 물가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여부가 아베노믹스 성패를 좌우할 전망
 - 일본의 과도한 정부부채는 아베노믹스의 최대 제약 요인
 - ‘13년 말 일본의 정부부채는 1,107조엔 규모로 GDP의 227% 전망
 - * GDP 대비 정부부채 : 48%('90년) → 104.8%('00년) → 227%('13년 전망)

- 미국 재정문제 및 출구전략, 유럽 재정위기 재부상 등
 -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2014년 2월 다시 발생해 장기화되면 일본을 비롯한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
 - 미국 FRB의 출구전략 시행도 일본 경제에 위험 요소
- 미흡한 실물경제 파급력
 - (은행대출) 대출 신장세가 미진하고 국내생산, 설비투자 회복도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 실물경제에도 완화 효과가 어디까지 파급될지는 앞으로의 향배에 달려 있는 상황
 - 은행대출은 8월 전년동월대비 2.3% 증가해 4월부터 신장률이 평행선을 긋고 있고, BOJ 공급자금은 기업으로 흘러들지 않고 있음
 - * (은행대출증가율) '12년 12월 1.4%, '13년 4월 2.1%, 8월 2.3%
 - * (기업설비투자) '12년 4분기 -1.5%, '13년 1분기 -0.3%, 2분기 1.3%
 - (설비투자) 저금리는 장기투자에 주효, '13년 2분기 실질설비투자는 전기대비 1.3% 증가로 6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 다만 설비투자의 현상을 나타내는 8월의 자본재 총 공급(계절조정 완료, 수송기계 제외)은 전월대비 4.7% 감소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음
- 실질소득 증가 미흡
 - 잔업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여는 1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어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물가상승은 오히려 생활을 꺾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소비지출) '13년 8월 -1.6%, (임금상승율) '13년 8월 -0.9%
-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 둔화 우려
 - 아베수상은 2014년 4월부터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8%로 인상한다고 발표(2013.10.1일)

- 2013년 하반기 이후 소비세 인상 전 선행수요가 예상되나 2014년 4월 1일 소비세 인상 이후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2013년 2차 추경예산(5조 엔 규모 예상)을 추진중

나. 시사점

- 2013년 11월 현재 아베노믹스는 5월~6월중 주가하락, 엔고, 장기국채 금리 상승이라는 일시적 위험요인을 극복하고 금융완화를 통한 엔저 유도, 디플레이션 탈피를 향해 순조로운 출발을 한 것으로 평가
 -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상승하고 장기금리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예상물가상승율이 오르면서 2% 물가 상승 목표를 향해 착실히 전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일본은행)
- 아베노믹스 향배에 대한 국내외 시각은 엇갈리고 있으나 **성패의 열쇠는 실물경제의 회복**으로 모아지고 있음
 - 일본이 장기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과 새로운 성장전략 추구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
 - 그러나 규제 완화, 신성장동력 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성장전략의 주요 정책은 미실시한 상태로 실제 성과는 입법이후 실제 시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
 - 금년 12월 6일까지 개최되는 임시국회 회기중 관련법안을 입법해 정책을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
 - 주요정책이 계획대로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우리 경제는 아베노믹스 성공, 실패에 따라 상응하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만반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

- (현황) 아베노믹스 실시로 이미 우리 경제는 대일 수출 감소, 일본인 관광객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 대일 수출은 '13년 1-9월 누계로 11.1% 감소, 부품소재류 보다는 식품 등 소비재 제품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 2012년 9월 이후 방한 일본인 관광객 수는 감소세가 확대되는 추세
 - * '12년 9월(31만/-3.8%), 10월(27만/-20.7%), 11월(25만/-24.8%), 12월 (23만/-24.0%)
 - * '13년 1~9월 일본인 관광객은 206만 명으로 전년(277만 명) 대비 25.5% 감소
- (성공시) 일본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해 마케팅 강화
 -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기업의 투자심리 호전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를 시장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
 - 일본기업들이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경우 엔저에 따른 가격경쟁력은 물론 비가격 경쟁력이 크게 상승할 것에 대비해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 필요
- (실패시)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경우 일본 경제는 유례없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그에 따른 후폭풍에 만반의 대비 필요
 - 일본경제는 다시 깊은 침체에 빠지고 막대한 부채는 더욱 늘어나 일본의 과도한 부채문제가 집중 이슈화될 가능성
 - 이 때 일본의 금융부실이 표면화되면 세계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은 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도 존재
 - 한국경제도 충격에서 건딜 수 있는 기초체력 강화로 대비 필요
 - (기업) 환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원고 상황에서도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체력 비축
 - (정부) 원/엔 환율 하락을 계기로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내수 활성화

참고

일본 부흥 전략의 액션 플랜

일본 산업의 부흥 플랜

① 긴급구조개혁 프로그램

□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

- 과소 투자, 과잉규제, 과당 경쟁의 세 가지 부작용을 근본부터 시정
- 향후 5년간을 「긴급구조개혁기간」으로 하고 집중적으로 착수
- 향후 3년간을 「집중투자촉진기간」으로 정하고 국내투자 촉진

□ 구체적인 대책

- 민간투자확대, 기업실정특례제도⁴⁾를 신설, 신사업투자촉진, 사업재편성촉진,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 공적지원의 규칙 제정 등을 실행

□ 주요 성과 목표

- 3년 동안 설비투자를 10% 증가시키고, 리먼쇼크 전의 민간투자 수준('07년 약 70조엔)으로 회복 * '12년 63조엔

② 고용제도 개혁·인재 역량 강화

- 경제 글로벌화,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의 양을 확보하고 질적 상향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
- 전원참가형 사회를 구축

4) 개별 기업에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

□ 구체적인 대책

- 고용유지형에서 노동이동지원형으로의 전환, 민간인재 비즈니스(민간 직업 소개 사업자와 근로자 파견 사업자)를 활용, 젊은층·여성 등의 활약 촉진, 대기아동⁵⁾ 해소를 가속화시키고, 대학개혁, 글로벌 인재 역량 강화, 고도 외국인재포인트제도⁶⁾의 재검토를 실행함.

□ 주요 성과 목표

- 향후 5년 간 실업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의 수를 20% 축소, 이직률을(임시직을 제외한 정규직 노동자) 9%(2011년 7.4%)로 상향
- 2020년에 여성 취업률(25~44세)을 73%(2012년 68%)로 상향
- 향후 10년내 세계대학 Top 100에 일본 대학 10개교 이상 등재

③ 과학기술 혁신 추진

- 당국과 지자체간의 종적관계를 폐지하고, 전략분야에 정책자원을 집중투입
- 전략분야에서 응용 및 활용까지 고려하는 출구지향 연구를 추진 하고, 실용화, 산업화, 시장획득

□ 구체적인 대책

- 종합과학기술회의⁷⁾의 사령탑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지원체제에 충실한, 지적재산전략 등을 실행

□ 주요 성과 목표

-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기술 혁신 세계 순위를 향후 5년 이내에 세계 제 1위로 개선

5) 탁아소의 입학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입학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아동을 지칭

6) 외국인재포인트제도 : 현행 외국인 수용 범위 안에서 경제성장과 신수요와 고용의 창조에 도움이 되는 고도의 능력과 자질을 가진 외국인(=고도인재)의 수용을 추진. 학력, 이력, 연봉 등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 포인트 합계가 일정점수에 도달한 경우, 출입국관리상의 우대조치(복합적인 재류활동의 허용과 재류이력에 관한 영주허가요건의 완화 등)를 제공하는 제도

7) 총리를 의장으로 주요 각료와 학계 등 민간 전문가 14명의 의원으로 구성

④ 세계최고수준의 IT사회의 실현

- IT를 활용한 민간주도의 기술 혁신을 추진
- 세계최고수준의 사업 환경을 실현하는 규제개혁을 철저히 시행

□ 구체적인 대책

- IT이용률 저변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 등을 실행

□ 주요 성과 목표

- ‘15년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데이터 내용 공개

⑤ 입지경쟁력 강화

- 세계에서 가장 기업 활동하기 좋은 나라를 목표로 과감한 사업 환경정비 진행

□ 구체적인 대책

- 국가전략특구의 실현, 공공시설운영권 등의 민간개방(PPP⁸⁾/PFI⁹), 온실가스 25% 감축 목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고함. 전력시스템 개혁 등을 실행

□ 주요 성과 목표

- 2020년까지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환경 순위에서 일본을 선진국 3위 이내로 개선 * ‘13년 15위
- 세계의 도시종합력 순위(Global Power City Index, 日모리기념재단 발표)에서 동경을 3위 이내로 개선 * ‘13년 동경 4위, 서울 6위

8)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공공 서비스를 운영

9)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공공 시설의 건설, 유지 관리, 운영 등을 민간 사업자에게 이전

⑥ 중소기업·소규모사업가 혁신

- 중소기업·소규모사업가가 지역경제를 재생시키고, 일본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 올림

□ 구체적인 대책

- 개인 보증(제 3자 보증인을 요구) 제도를 재검토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 주요 성과 목표

- 개업률·폐업률 합산 10%대('13년 미국·영국 수준) 목표. 개업률이 폐업률을 상회하는 상태 지향
 - * 개업률·폐업률 합산 '04년-'09년 일본 평균 4.5%
- 2020년까지 흑자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를 70만 개사에서 140만 개사로 늘림
- 향후 5년간 새로 1만개사의 해외진출(해외 창업 및 공장 설립)을 실현시킴

전략시장 창조 플랜

①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

□ 지향하는 사회상

- 예방부터 치료, 조기재택복귀에 이르는 적당한 케어 사이클을 확립

□ 구체적인 대책

- 효과적인 예방 서비스와 건강관리를 충실히 하여 노후에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
 - 건강수명연장산업의 육성, 예방·건강관리에 관한 새로운 구조 조성, 의료·개호정보의 전자화의 추진, 일반용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허용 등을 실시
- 의료관련산업의 활성화에 의한 세계 최첨단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지향
 - 의료분야 연구개발의 사령탑기능(「일본판 NIH」)의 창설, 의약품·의료기구 개발·재생의료연구를 가속화시켜 규제·제도 개혁, 의료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강화 등을 실시
- 질병과 사고 시 양질의 의료·개호의 문턱을 낮춰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
 - 의료·개호 서비스의 고도화, 생활지원서비스¹⁰⁾·임대 주택 제공 체제 강화, 로봇개호기 개발 5개년 계획 추진 등을 실시

□ 시장규모

- 국내 10조엔(2020년), 11조엔(2030년) * '13년(추정치) 4조엔
- 해외 108조엔(2020년), 160조엔(2030년) * '13년(추정치) 40조엔

□ 고용규모

- 168만 명(2020년), 210만 명(2030년) * '13년(추정치) 55만 명

10) 보육가사 대행, 건강·복지 세미나 개최, 헬스케어 제품 및 식사 제공

② 그린·경제적 에너지의 융합 실현

□ 지향하는 사회상

- 다양·양방향·네트워크화에 의한 클린·저렴한 에너지 사회를 구축

□ 구체적인 대책

-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가 공급되는 사회를 지향
 - 재생가능한 에너지 도입을 위한 규제·제도 개혁
 -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의 추진
 - 석탄화력 등 화력발전과 관계된 환경종합평가의 명확화·가속화
- 경쟁을 통한 에너지의 효율적 유통이 실현되는 사회
 - 전력 시스템의 개혁 실행, 2차 전지 기술개발, 국제표준화¹¹⁾ 지향, 에너지 보급 확대
 - 차세대 디바이스·부품소재의 연구개발·사업화 등을 실시
- 에너지를 현명하게 소비하는 사회
 -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기준의 단계적 적합 의무화, 탑 러너 제도 (Top-runner, 에너지 효율 목표 관리제)의 적용확충, 연료전지기술개발·저 코스트화 등을 실행

□ 시장규모

- 국내시장 10조엔(2020년), 11조엔(2030년)
 - * '13년(추정치) 4조엔
- 해외시장 108조엔(2020년), 160조엔(2030년)
 - * '13년(추정치) 40조엔

□ 고용규모

- 168만 명(2020년), 210만 명(2030년)
 - * '13년(추정치) 55만 명

11) 국제표준화기관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에 의해 품질, 성능, 안전성, 크기, 시험 방법 등의 항목에서 국제 표준 제정

③ 안전·편리하고 경제적인 차세대 인프라 구축

□ 지향하는 사회상

-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인텔리전트 인프라 실행

□ 구체적인 대책

- 안전하고 강인한 인프라가 낮은 비용에서 실현되는 사회 지향
 - 인프라의 수명을 늘리는 기본 계획을 책정
 - 이를 활용한 인프라 점검·분석시스템 구축
 - 신소재 개발, 우주 인프라의 정비·활용 등을 실시
- 사람과 물건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 지향
 - 안전운전 지원 시스템, 자동주행시스템 개발·환경정비
 - 차량관련 빅데이터에 의한 정보 서비스 환경정비
 - 물류시스템의 고도화 등을 실시

□ 시장규모

- 국내시장 16조엔(2020년), 33조엔(2030년)
 - * '13년(추정치) 2조엔
- 해외시장 168조엔(2020년), 210조엔(2030년)
 - * '13년(추정치) 55조엔

□ 고용규모

- 168만 명(2020년), 210만 명(2030년)
 - * '13년(추정치) 55만 명

④ 세계를 사로잡을 지역자원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지역사회 실현

□ 지향하는 사회상

- 세계를 사로잡을 지역자원 브랜드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한 자긍심 강한 지역사회를 실현

□ 구체적인 대책

-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고품질의 농림수산업·식품을 생산하는 농어촌사회를 지향
 - 담당자에게 농지집적, 경작포기농지의 발생 방지·해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 농업과 상공업 연대에 의한 6차 산업화¹²⁾의 추진, 국가별·품목별 수출전략의 책정

□ 시장규모

- 농업
 - (국내) 2020년까지 농업·식료품 관련 산업생산금액 120조 엔으로, 6차 산업의 시장규모를 10조 엔으로 확대
 - * '13년 농업·식료품 관련 산업생산금액 100조 엔, 6차 산업 시장규모 1조 엔
 - (해외) 2020년까지 일본 식품의 해외수출 규모를 680조 엔으로 확대
 - * '13년(추정치) 340조 엔
- 관광
 - 방일 외국인의 일본 국내에서의 여행소비 금액을 2030년까지 4.7조 엔으로 확대 * '10년 1.3조 엔

□ 고용규모

- 농업
 - 신규 농업종사자를 늘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40대 이하 농업종사자 수를 40만 명까지 확대 * '13년(추정치) 약 20만 명
- 관광
 - 방일외국인의 여행소비로 인한 고용효과를 2030년까지 83만 명으로 확대 * '10년 25만 명

12) 6차 산업화(1차X2차X3차=6차) : 1990년대 중반 현재 도쿄대학 명예교수로 재직중인 이마무라 나라오미씨가 처음 제창한 조어. 농림수산업 등 농림어업자가 생산(1차산업)하고 가공·판매(2,3차 산업)하는 것을 일체적으로 행하는 것.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촉진. 농림수산업을 부흥시켜 고용 확대와 소득 향상을 목표로 함.

국제 진출 전략

① 전략적인 통상관계 조성 및 경제연대 추진

- 글로벌한 경제활동의 기본이 되는 경제연대를 추진
-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RCEP(동아시아 포괄적 경제 협력체), 한중일FTA 교섭을 FTAAP¹³⁾(아시아 태평양 자유 무역권) 활성화를 위한 중간 단계로 인식

□ 구체적인 대책

- 경제연대 교섭 추진, 규제를 국제적 표준에 맞춰 완화, 전략적인 투자 협정·조세조약의 결성 등을 실시

□ 주요 성과 목표

- ‘18년까지 무역의 FTA 비율 70%까지 확대
* ‘13년(추정치) 무역의 FTA 비율 19%

② 해외시장 획득을 위한 전략적 대응

- 세계의 방대한 인프라 시스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 일본의 우위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외시장을 획득

□ 구체적인 대책

- 인프라 수출, 자원 확보 추진
 - 탑 세일즈¹⁴⁾의 실행과 관민연대체제의 강화, ODA(공적개발원조)의 전략적인 활용, 공공 재정의 충실한 운영

13)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 ‘06년 베트남 APEC 정상회의에서 지역경제통합 증진방안의 하나로 제시됨. APEC 회원국 간의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함

14) 탑 세일즈 : 기업의 CEO가 직접 자사 제품의 특징 및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 국가의 대표, 지자체장이 국가와 지방의 산물·산업을 다른 국가나 지역에 판매를 위해 행하는 활동

○ 잠재력이 있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중점 지원

-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지원체제를 강화, 해외 현지에 「해외 원스톱 상담 창구」를 창설, 일본 기업의 인재 육성과 글로벌화 추진

○ 쿨 재팬의 추진

- 홍보 역량의 강화, 쿨 재팬 추진 기구를 활용한 쿨 재팬의 전략적인 추진, 콘텐츠 등의 해외 진출을 촉진

③ 일본의 성장을 지탱하는 자금·인재 기반의 정비

- 일본 국내의 철저한 글로벌화 진행
- 일본 기업에 의한 글로벌화를 통해 경제활동의 근간을 지탱

□ 구체적인 대책

- 대내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지향, 특구제도 개혁, 정부의 외국기업지원·유치체제 강화
- 글로벌 인재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인재육성위원회 창설(‘12년)

□ 주요 성과 목표

- 2020년까지 대내 직접 투자 잔고를 35조 엔까지 확대
* ‘12년 말 17.8조 엔

작성자

◆ 도쿄무역관	손 호 길 차장
◆ 오사카무역관	김 경 미 차장
◆ 선진시장팀	신 태 철 차장

Global Market Report 13-061

제목

발 행 인 | 오 영 호
편 집 인 | 김 성 수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3년 1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globalwindow.org

Copyright © 2013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